



## 해운대구의회 4대폭력·이해충돌 방지 교육

해운대구의회(의장 심윤정)은 지난 10월 18일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으로 양성 평등 성인지 가치관을 함양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실시됐다. 주양순 국민권익

위원회 청렴교육 강사의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강의에 이어 최은희 강사의 4대 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심윤정 의원은 "구의원들은 행정을 감시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만큼 청렴하고 건전한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구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5분 자유발언 제274회 제1차 본회의 (2023.10.11.)

#### 반여 반송 재송 관광자원 활용 축제 개최를



박성식 의원  
(반여2·3동, 재송2동)



원문 보기

해운대구는 매년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는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어 반여 반송 재송 지역은 소외돼 왔다. 지역 축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가치를 높이며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반여 반송 재송에서도 구 주관 대규모 지역 축제를 개최해야 한다. 축제를 개발하려면 관광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 참여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반여 반송 재송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발굴해 주길 바란다.

### 5분 자유발언 제274회 제2차 본회의 (2023.10.18.)

#### 주민 없는 주민설명회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



김성군 의원  
(반송1·2동)



원문 보기

석대천을 테마형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 주민설명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급하게 변경돼 주민 참석이 어려웠고, 실제 참석한 수가 매우 적었으며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10월 14일에 동일권역에서 3개의 축제가 동시에 열려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게 됐다. 지역 축제를 개최할 때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시, 장소 선정을 신중히 하기 바란다.

#### '묻지마 범죄' 예방 우리 모두가 나설 때



이상곤 의원  
(재송1동)



원문 보기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불안과 공포가 확산하고 있으며, 이제는 경찰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민·관·경이 협력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 예방 환경설계 사업 확대(CEPTED), 정신 보건 시스템 구축,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모두가 협력해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서야 한다.

#### 송정해수욕장 오수,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최은영 의원  
(중2동, 좌2동, 송정동)



원문 보기

송정해수욕장으로 흘러가는 오수 문제를 확인하고 해수욕장 인근의 오수 관로 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화장실 오물과 상가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해수욕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도 부산시의 오수 관로 교체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송정은 4년 뒤에 마무리된다고 한다. 송정은 지역 관광을 대표하는 곳이다. 해운대구는 부산시에 빠른 조치를 요청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쾌적함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안



유점자 의원  
(중2동, 좌2동, 송정동)



원문 보기

급속한 노령화로 요양보호사 부족과 높은 이직률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5천700여 명, 2030년에 필요한 수는 7만 4,000명으로 예상되며 산업 전체 평균 이직률과 비교해 볼 때 이직률은 41%로 높다. 이는 열악한 근로 조건과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비용, 효율성 문제, 서비스 품질 하락을 초래한다.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교육, 근속률 향상, 업무 관련 폭언·폭행 대처를 위한 지원과 근로 조건 개선이 필요하다. (제1차 본회의)

#### 공사장 소음·먼지 피해 심각, 처벌은 솜방망이



원문 보기

공사장 생활소음, 진동,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구청은 과태료 부과만 반복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주민들의 안전과 기본권 수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관련법을 무시하는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방음·방진·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미흡이나 미운행, 작업시간 미준수 등 상습적인 미준수 적발 시 공사 중지 등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 건축 인허가 부서가 더욱 철저한 현장 지도 감독에 나서야 하며, 공사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제2차 본회의)